

# 대법원 2023도16499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이동원)는,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1과 선거사무소 직원 등인 공동피고인들이 당내경선 절차에서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, 피고인1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원심판결(피고인1: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)을 확정함(대법원 2023. 2. 15. 선고 2023도16499 판결)

## 1. 사안의 개요

### 가. 피고인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1은 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,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 직원 등임
-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
  -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
    - 피고인1 등은 2019. 12.경부터 2020. 3.경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였음
  - 지지호소 전화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
    - 피고인1 등은 2019. 9.경부터 2019. 12.경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1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였음
-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
  - 피고인1은 2019. 11. 3.부터 2019. 12. 3.경까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들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71,320원 상당의 식사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음

■ **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관련 매수**

- 피고인1 등은 2019. 12. 20.경부터 2020. 2. 20.경까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관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

■ **정치자금법위반**

- 피고인1 등은 2019. 9. 18.경부터 2019. 11. 28.경까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들로부터 3,120,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

## 2. 소송경과

■ 제1심: **일부 유죄, 일부 면소**(주문 면소 및 이유 면소)

- **피고인1: 징역 10월, 집행유예 2년**
-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

■ 원심: **피고인1, 7 부분 파기**, 피고인2,4,5,6에 대한 면소 부분 파기

- **피고인1: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, 일부 무죄**
- 피고인2,4,5,6에 대한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무죄
- 피고인7: 무죄
- 검사의 피고인2,3,4,5,6,8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인 2,3,4,8의 항소 모두 기각

● **판단 내용**

-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– **유죄**
- 공직선거법상 지지호소 전화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– **무죄, 면소**
-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– **유죄**
-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관련 매수 – **유죄**
- 정치자금법위반 – **유죄**
- 피고인1,2,3,4,8이 상고함

### 3. 대법원의 판단

#### 가. 쟁점

- 공직선거법 각 규정의 위헌 여부
- 선거사무소의 범위
- 비례대표 경선절차에서 기부행위의 상대방
-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고,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
-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

#### 나. 판결 결과

- 피고인들 **상고 모두 기각**(원심 수긍)

#### 다. 판단 내용

- 공직선거법위반죄(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, 기부행위 금지 위반, 당내경선관련 매수),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,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음